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의 FTC v. Qualcomm 사건 판결*

법무법인(유) 총정 변호사 || 나 지 원

I. 서설

201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porated, QI) 및 2개의 계열회사(이하 이들 3사를 통칭하여 ‘퀄컴’이라 한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2009년 7월, 공정위는 퀄컴의 로열티 차별과 조건부 리베이트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약 2,7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2009년 퀄컴에게 부과되었던 과징금에 대하여 일부 취소 판결¹⁾을 선고하였고, 이를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²⁾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에서도 2019년 5월 21일, 퀄컴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의 금지명령 판결³⁾이 나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7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이하 ‘FTC’라 한다)는 퀄컴의 행위가 셔먼법(Sherman Act) 제1조와 제2조 및 FTC법 제5조a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퀄컴을 상대로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ve relief)을 구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San Jose)에 위치한 북부연방지방법원(이하 ‘연방지방법원’이라 한다)은 FTC의 손을 들어 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앞으로 ① 고객의 특허실시상태(patent license status)에 따라 모뎀칩의 공급을 조절해서는 안 되며, 모뎀칩 공급, 관련 기술 지원, 소프트웨어 접근의 차별적 제공 및 이용 금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건 하

* 본고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이나 특정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3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금액(약 2,245억 원)으로 변경하고, 기존 과징금의 일부(약486억 원)를 취소한 바 있다.

2) 서울고등법원 2017누48 사건(현재 진행 중). 퀄컴은 취소소송 이외에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년 9월 기각(2017아66결정)된 바 있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 역시 퀄컴의 재항고를 기각(2017무791결정)하였다.

3) Federal Trade Commission v. Qualcomm Incorporated(Case 5:17-cv-00220; Federal Injunctions); 이하에서는 이 사건 판결문을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으로 약칭한다.

에 고객들과 계약을 (재)체결하고 ② FRAND 조건 하에 모뎀칩 공급자들에게 표준필수특허의 소진적인 실시허락을 허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 혹은 사법적 방법에 의하여 그러한 조건을 결정해야 되고 ③ 명시적 또는 사실적(de facto) 형태의 모뎀칩 공급의 배타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④ 잠재적인 법 집행이나 규제 사안에 관하여 정부와 연락하는 고객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⑤ 위 규제 조치들이 준수되도록 쉼금은 7년간 매년 FTC에게 위 준수 사항 이행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⁴⁾

이하에서는 사건의 배경 사실관계, 문제되는 법의 내용 및 주요 용어 등(Ⅱ)을 살펴본 다음, 연방지방법원의 판단 내용과 근거(Ⅲ)를 정리하고, 현 시점에서 생각해볼 시사점(Ⅳ)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건의 배경

1. 사실관계

퀄컴은 반도체와 모뎀칩 등 각종 무선통신 관련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미국 기업이다. 퀄컴은 Qualcomm CDMA Technologies(QCT)라는 회사를 통하여 자사의 모뎀칩과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Qualcomm Technology Licensing(CTL)을 통하여 자사의 특허를 실시허락하고 있다. 삼성, 애플(Apple), 화웨이(Huawei) 등의 단말기 제조사들은 퀄컴과 같은 모뎀칩 공급자로부터 모뎀칩을 구입하여 휴대전화를 생산·판매한다.

2.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협약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란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특허이다. 이동통신과 같은 정보통신 산업은 기술 간의 상호 호환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표준화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SSO)는 특정 기술을 표준으로 설정한다. 표준으로 채택된 해당 기술이 특허 권으로 보호되는 경우 특허 보유자는 자기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권리를 남용할 위험이 있

4)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 pp.227-233.

기 때문에, 표준화기구는 표준필수특허의 특허권자에게 표준화 절차에서 장차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약속을 'FRAND 협약'이라 칭한다.⁵⁾

3. 셔먼법과 FTC법

셔먼법 제1조는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담합 또는 공모를 금지하며, 위 조항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합의의 존재와 ② 합의가 비합리적인 거래 제한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 셔먼법 제2조는 독점 행위를 금지하며, 독점화 행위(offense of monopolization)는 ① 관련 시장에서의 독점력 소유 ② 배제적 행위를 통한 의도적인 독점력의 취득 또는 유지로 구성된다. 제1조가 개별 기업 간의 조율된 행동(concerted activity)을 금지한다면 제2조는 단일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한다. 이처럼 두 조항은 별개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주로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근거하여 FTC가 셔먼법 제1조상의 합의의 존재와 그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셔먼법 제2조상의 독점력의 존재와 특정 행위의 배제적 효과를 먼저 입증하고, 피고에게는 경쟁촉진적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을 묻는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⁶⁾

한편, FTC법 제5조는 '거래상의 불공정한 방법'을 금지하는데, '불공정한 방법'에는 셔먼법에 반하는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셔먼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당연히 FTC법 제5조 위반이기도 하다. 위 조항은 셔먼법을 문언 그대로 위반하지 않더라도 위반에 가깝거나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도 금지하기 때문에, FTC는 위 조항에 따라 폭넓게 거래상의 불공정한 방법을 금지할 수 있다. 여기서 '불공정성'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 관행(normally acceptable business behavior)을 기준으로 판단한다.⁷⁾

이 사건의 법원은, 먼저 셔먼법 제2조에 따라 퀄컴이 관련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고, 퀄컴의 문제되는 행위가 셔먼법 제1조에 의한 불합리한 거래 제한에 해당하는지, 또는 셔먼법 제2조에 의한 배제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사건 법원은 퀄컴 사건에서 오로지 FTC법에 위반되는 행위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셔먼법 위반에 따라 FTC법 위반의 점이 있었는지를 가리고자 하였다.⁸⁾

5) 나지원, 「FRAND 협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서울대 법학연구총서(77), 경인문화사, 2018, 23-28면.

6)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 pp.19-21.

7)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 pp.18-19.

III. 연방지방법원의 판단

1. 관련시장 확정 및 독점력 판단

(1) 판단 방법

사업자의 독점력(monopoly power)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시장을 확정해야 한다. 관련시장의 확정은 지역시장과 상품시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지역시장은 판매자가 영업하고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으로 제한되고, 상품시장은 상품의 특성, 시장에 관한 인식, 상품 기능의 합리적 대체 가능성 또는 거래 대상과 대체재 간의 수요교차탄력성 등에 의하여 정의된다.⁹⁾ 주로 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테스트를 이용하여, 독점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작지만 유의미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상품의 범위를 관련 상품 시장으로 본다.¹⁰⁾ 관련시장이 확정된 후에는 문제되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들이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진입장벽의 존재와 정도 등의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독점력을 판단한다.¹¹⁾

(2) CDMA 모뎀칩 시장

FTC는 퀄컴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CDMA 모뎀칩 세계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 바, 법원은 CDMA 모뎀칩의 대체재가 없는 점, 퀄컴 내부적으로 CDMA 모뎀칩 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인정한 점, 퀄컴이 프리미엄(premium)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수평적 SSNIP)을 고려하여 CDMA 모뎀칩 세계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위 시장의 진출에 있어서 오랜 개발 기간과 매우 높은 재정 안정성이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높고, 퀄컴이 가격 제한(price discipline) 없이 CDMA 추가금(adder)을 요구할 수 있었으며, 미디어텍(MediaTek)이 시장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퀄컴이 CDMA 모뎀칩 시장의 지배적 점유율을 유지한 점에 비추어, 법원은 퀄컴의 독점력을 인정하였다.¹²⁾

8)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 pp.22.

9) FTC v. Qualcomm Inc.,(N.D. Cal 2019), pp.22-23.

10) 이호영, 「독점규제법」, 홍문사, 2015, 12면.

11) FTC v. Qualcomm Inc.,(N.D. Cal 2019), pp.23-24.

12) FTC v. Qualcomm Inc.,(N.D. Cal 2019), pp.25-33.

(3) 프리미엄 LTE 모뎀칩 시장

프리미엄 LTE 모뎀칩 시장도 CDMA 모뎀칩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장은 세계시장으로 보았다. 상품시장에 관해서는 퀄컴 내부적으로 모뎀칩을 프리미엄(premium), 하이(high), 미드/로우(mid/low)로 분류한 점, 고급상품이 일반상품과 별개의 시장을 구성할 수 있는 점에 근거하여, 프리미엄 LTE 모뎀칩 세계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퀄컴은 프리미엄 LTE SoC¹³⁾ 모뎀칩의 유일한 외부공급업체이며, 상당한 기간 동안 퀄컴이 프리미엄 LTE 모뎀칩에 관하여 독점적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고, 프리미엄 LTE 모뎀칩의 개발에는 더욱 많은 투자가 요구되므로, 위 시장에서도 퀄컴의 독점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¹⁴⁾

2. 퀄컴의 경쟁제한적 행위

(1) 경쟁제한적 행위의 정의 및 판단 기준

경쟁제한적 행위는 경쟁자의 사업 기회를 방해하고, 지나치게 제한적인 방법을 통하여 경쟁을 저해하거나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촉진시키지 않는 행동이다. 법원이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청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적 행위와 합리적인 관점에서 독점력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면 된다. 배타적 행위가 이미 존재하는 경쟁사업자뿐만 아니라, 신생경쟁사업자들을 겨냥한다고 인정될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¹⁵⁾

(2) 단말기 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적 행위

퀄컴은 각 CDMA와 프리미엄 LTE 모뎀칩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단말기 사업자(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이하 'OEM'이라 한다)에 대한 다양한 경쟁제한적 행위를 하였다. 우선, 퀄컴은 특허소진(patent exhaustion)¹⁶⁾을 회피하기 위하여, OEM과 개별 실시계약(separate patent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해당 OEM에게 모뎀칩을 판매하지 않거나 모뎀칩의 공급의 중단에 이르기도 하였다. 2012년경에 소니(Sony)와

13) 'System-on-Chip'의 약자로, 한 개의 칩에 완전한 구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들어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백운철 외,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학술정보, 2012, 73면).

14)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 pp.34-41.

15)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 pp.41-44.

16) 특허소진이론에 따르면, 특허를 받은 제품의 최초 정당한 판매(initial authorized sale)가 있을 경우 특허권자는 더 이상 그 제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TV를 구입할 경우 구매자가 TV 생산자에 대하여 별도의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특허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위 판결문, p.44).

2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의 FTC v. Qualcomm 사건 판결

퀄컴 간의 특허계약이 종료에 이르자, 퀄컴 측은 소니에게 “모뎀칩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새로운 특허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뎀칩의 선적을 보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공급 중단의 위협이 있는 지 일주일 후, 소니는 퀄컴과 임시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¹⁷⁾

퀄컴은 위와 같은 모뎀칩 공급의 중단 또는 그러한 위협을 통하여 특허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특허실시 분쟁의 종료, 모뎀칩 경쟁자 배제 등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었다. 비보(Vivo)의 휴대전화는 소니의 칩보다 미디어텍의 칩과의 호환성이 더 좋았는데, 퀄컴 측은 비보에게 QTL 특허 협상의 진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져야, 다시 말하면 미디어텍과의 거래를 하지 않아야 모뎀칩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위협을 가하였다.¹⁸⁾

또한, 퀄컴은 칩 인센티브 펀드를 사용하여 퀄컴의 모뎀칩 가격을 낮추어 OEM으로 하여금 퀄컴의 실시조건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칩 인센티브 펀드(chip incentive fund)’란 일정 비율 이상의 칩을 퀄컴에서 구매할 경우 판매대금의 일부를 OEM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QTL의 칩 인센티브 펀드 사용은 OEM이 퀄컴의 경쟁사업자로부터 모뎀칩을 구입하는 것을 봉쇄하는 사실상의 배타적 거래로서 기능하였다. 엘지전자(LGE)는 퀄컴으로부터 최소 85%의 CDMA 모뎀칩을 구매하는 대신, 구매가격의 3~5%를 리베이트로 반환받았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퀄컴과 체결한 전략적 관계 계약(Strategic Relationship Agreement)에 따라 퀄컴으로부터 프리미엄 모뎀칩 전량과 일정 비율 이상의 중·고급 칩을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센티브 펀드를 받았다.¹⁹⁾

위의 경우뿐만 아니라 화웨이 등에게 실시료 없는 상호실시허락(cross-license)을 요구한 행위, 퀄컴이 갖고 있는 특허에 관한 아무 기술적·법적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레노보(Lenovo)에게 비합리적으로 높은 실시료를 요구한 행위 등은 모두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정되었다.²⁰⁾

(3) 경쟁사업자에 대한 표준필수특허 실시허락 거절

연방지방법원은 퀄컴이 경쟁관계에 있는 모뎀칩 공급자들에게 무선표준필수특허의 실시를 거절한 행위가 경쟁자들의 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성공을 방해·지연하거나 경쟁자들을 퇴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퀄컴이 계속 높은 실시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

17)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 pp.52-56.

18)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 pp.105-107.

19)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 pp.45-51; pp.60-62.

20)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 pp.62-64; pp.72-76.

다고 보았다. 퀄컴은 2008년경, 경쟁사였던 미디어텍의 특허실시 요구를 거절하고, ‘인정된 구매자(authorized purchaser)’에게만 모뎀칩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의 계약(CDMA ASIC Agreement)만을 제안하였다. ‘인정된 구매자’는 모두 퀄컴으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자들이어서 퀄컴은 미디어텍의 고객을 결정할 수 있었으며, 위 계약에 따르면 미디어텍은 각 구매자에게 판매한 모뎀칩의 수량을 퀄컴에게 알려야 하였다. 결국, 퀄컴의 실시허락 거절로 인한 지연 때문에 미디어텍의 모뎀칩이 시장에 출시될 당시에는 이미 시대에 뒤쳐진 상태였다. 퀄컴은 비아(VIA)에게도 같은 조건의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으며, 두 번에 걸쳐 인텔(Intel)의 특허실시 요구를 거절하기도 했다.²¹⁾

(4) 경쟁자에게 표준필수특허를 실시할 FRAND 확약 및 반독점법(antitrust)상 의무

1) FRAND 확약상 의무

이 사건에 선행하여 내려진 2018년 11월 6일자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사실심리생략판결)에서 퀄컴은 표준화기구인 미국 통신산업협회(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TIA)와 통신정보표준협회(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ATIS)에게 FRAND 확약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퀄컴은 경쟁자인 모뎀칩 공급자들에게 비차별적으로 표준필수특허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퀄컴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을 하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과거에는 모뎀칩 공급자들에게 실시허락을 하기도 하였고, 퀄컴 역시 에릭슨(Ericsson) 등의 다른 회사로부터 칩수준(chip-level)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퀄컴은 이후 경쟁자들에게 실시허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OEM으로부터 높은 실시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쟁자들에 대한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을 중단하였고, 동종업계의 에릭슨이나 노키아(Nokia)와 같은 표준필수특허권자도 동일한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²²⁾

2) 반독점법상 의무

미국 연방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경쟁자들을 도울 의무는 없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경쟁자와의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경쟁제한적 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Trinko 판결²³⁾ 및 Aspen Skiing 판결²⁴⁾ 참조). MetroNet

21)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 pp.114-120.

22)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 pp.124-132.

Services Corp. v. Qwest Corp. 사건²⁵⁾에서 연방제9항소법원은 반독점법상 책임의 발생에 유의미한 3개 요소로 ① 수익성 있는 자발적 거래 과정의 일방적 종료 ② 경쟁제한적 약의에서 비롯된 거래 거절 ③ 기존 시장에서 다른 고객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경쟁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들었다. 퀄컴으로서는 경쟁자들에게 실시허락을 하면 실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과의 거래가 수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들에 대한 실시허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점, 퀄컴 스스로 실시허락의 거절 목적이 높은 실시료의 유지와 QCT에 대한 경쟁 방지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 퀄컴을 비롯한 표준필수특허 소지자들이 판매자인 모뎀칩 표준필수특허 실시허락시장이 이미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방지방법원은 퀄컴에게 경쟁자들을 상대로 표준필수특허를 실시허락할 반독점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²⁶⁾

(5) 애플과의 배타적 거래와 경쟁저해(harm)

퀄컴이 애플과 2011년에 체결한 이행 계약(Transition Agreement; TA) 및 2013년에 체결한 1차 수정 이행 계약(First Amendment to Transition Agreement; FATA) 하에, 애플은 상당한 양의 모뎀칩을 퀄컴으로부터 구입할 경우 인센티브로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 이행 계약에 의하면, 애플이 비(非)퀄컴 기저대역 모뎀(baseband modem)을 사용한 제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위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고, 환수 조항에 따라 애플은 이미 받은 인센티브를 퀄컴에게 환급해야 하였다. 법원은 위 계약의 실질적 효과(practical effect)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애플과의 거래가 사실상(de facto) 배타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배타적 거래는 다른 제조사와 브랜드간 경쟁(inter-brand competition)의 촉진과 같은 경제적 이점도 있으나 ‘경쟁을 상당히 봉쇄(substantially foreclosed competition)’할 경우에는 서면법에 반한다. 애플과 거래하면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며 최첨단 제품들을 시장 현장에서 검증할 기회가 생기고 표준화기구에서의 지위가 강화되는 등의 이익이 있는데, 퀄컴은 다른 경쟁자들을 배제하여 자사만이 상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애플과의 계약 기간이 총 5년 이상으로서 장기적이라는 점, 배타적이지 않은 거래로도 수익을 올릴 수

23) 540 U.S. 411.

24) 472 U.S. 585.

25) 383 F.3d 1124, 1131(9Cir, 2004).

26)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 pp.137-141.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연방지방법원은 쉐프린과 애플 간의 거래는 경쟁제한적이고 시장의 상당 부분을 봉쇄했다고 판단하였다.²⁷⁾

(6) 과도하게 높은 실시료의 책정

연방지방법원은 쉐프린이 책정한 실시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도하게 높다고 보았다. 첫째, 쉐프린의 실시료는 쉐프린이 가진 특허의 가치보다도 쉐프린의 시장점유율에 기대어 높은 것이다. 모뎀칩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가 없었다면 실시료 수준 책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핸드폰을 실시료의 기초로 삼는 것은 특허실시비례에 근거한 할당원칙(patent rule of apportionment)에 반한다. 위 원칙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실시자가 특허를 침해하는 부분(feature)에 따른 합리적인 실시료만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항소법원은 “일반적으로 실시료가 최소판매가능한 특허실시단위(SSPPU; smallest salable patent-practicing unit)에 기초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²⁸⁾ 오늘날의 휴대전화는 영화 재생, 데이터 저장, 영상 촬영 등의 기능도 수행하고 와이파이(Wi-Fi)에 의한 데이터 송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방지방법원은 본건 판결에서 휴대전화를 최소판매가능 특허실시단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²⁹⁾

IV. 시사점

본 판결로 인하여, 사건의 당사자인 미국 FTC를 비롯한 해외 각국의 경쟁당국이 쉐프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내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는데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을 필두로 중국,³⁰⁾ 일본,³¹⁾ 유럽연합(EU) 등에서 쉐프린의 행위를 문제 삼은 바 있지만, 쉐프린의 사업 영역이 전 세계인 이상 쉐프린이 마주해야 할 법적 분쟁은 아직도 적지 않다. 나

27)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 pp.141-157.

28) Power Integrations Inc. v. Fairchild Semiconductor Int'l Inc., 904 F.3d 965, 977(Fed. Cir., 2018); LaserDynamics, Inc. v. Quanta Computer, Inc., 694 F.3d 51, 67(Fed. Cir., 2012).

29)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 pp.157-173.


30)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5년 2월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한 과도한 로열티, 특허 끼워팔기 등을 시정조치하고 벌금 약 1조 원을 부과한 바 있다.

31)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2009년 9월 휴대전화 제조사에 무상의 상호실시허락(cross grant)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으나, 쉐프린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과 10년 간의 재조사를 거쳐 이제적으로 2019년 3년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취소한 바 있다(Cnet, “Qualcomm’s not a monopoly, Japan decides after decadelong investigation”, 2019, 3, 15, (<https://www.cnet.com/news/qualcomm-not-a-monopoly-japan-decides-after-decade-long-investigation/>)).

2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의 FTC v. Qualcomm 사건 판결

아가 반독점법 위반이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각 국가에서 경쟁사업자와 소비자 등에 대한 민사책임도 동반될 수 있어 퀄컴이 느끼는 법적 리스크는 상당할 것이다.

모바일 경제시대에 퀄컴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하여 모바일 단말기 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시킨다는 관점에서 본건 판결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사업자간 기술경쟁 이면에서 새로운 통신기술 혁신을 조장하고 이를 확산하는 행위와 동기가 위촉되지 않도록 반독점법 판단에 있어 보다 균형 있는 법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판결에서 FRAND 확약과 반독점법리에 따라 경쟁자와 거래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시와 관련하여, 그러한 이유 근거 중에 하나로 실시허락 거절이 ‘수익성 있는 자발적 거래 과정의 일방적 종료’에 해당한다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퀄컴이 더 좋은 실시 조건과 더 높은 실시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경쟁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지 않을 거래 선택(영업)의 자유와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필수특허의 행사와 그 남용의 통제와 관련된 법리에 있어서 FRAND 확약의 법적 효력이 선행적으로 보다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혀 둔다.³²⁾

본 판결에 대하여 퀄컴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같은 법원에 구제 조치들에 대한 집행 정지(motion to stay enforcement of FTC’s antitrust remedies)를 신청하였으나, 2019년 7월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현재 이러한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이 연방제9항소법원에 신청되어 신속절차에 회부된 상태이다.³³⁾ 본 판결 과정에서 반독점법 집행을 분담하는 미국 법무부(DOJ)는 퀄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할 경우 미국의 5G 경쟁력까지 고려한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³⁴⁾ 향후 미국연방법원의 판단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32) 나지원, “FRAND 확약의 계약적 효력에 관한 고찰”, LAW & TECHNOLOGY(제13권 제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17.5.) 참조.

33) Foss Patents, “Qualcommfiles motion with Ninth Circuit for partial stay of FTC antitrust remedies”, 2019. 7. 8.(<http://www.fosspatents.com/2019/07/qualcomm-files-motion-with-ninth.html>).

34) ZDnet Korea, 美 법무부 “퀄컴 제재, 5G 경쟁 감안해 신중해야”, 2019. 5. 3.(<http://www.zdnet.co.kr/view/?no=20190503110902>).